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10.20.(화) 10월 3주차 (제26-54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수입규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Covered List」 기반 수입규제 확대 동향 ····· 2
- (규제) 미 재무부, 해외투자 규제 위반 첫 민사제재… 투자액의 2배 벌금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적법성에 대한 정부·원고 간 법정 공방 지속 ····· 9
- (관세·제재)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및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대상 관세·제재 적용 면제 ····· 10
- (수출통제) 中, 이중용도 드론·준설 및 터널 굴착 장비 수출통제 확대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법안) 관세 관련 법안 1건 ····· 12
- (행사안내) ITIF, CSIS 등 행사 3건 ····· 12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10.22(목)	• 10월 셋째 주 주간 실업급여 청구(Weekly Jobless Claims)
10.23(금)	• 미국 제조업·서비스 구매자관리지수 예비치(US Flash Manufacturing·Service PMI)
10.27(화)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U.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10.28(수)	• FOMC 미 금리 결정(U.S. interest rate decision)

워싱턴 포커스

(수입규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Covered List」 기반 수입규제 확대 동향

- 미국 FCC, 장비 인증 연계로 해외생산 드론·라우터·인버터·로봇의 미국 시장 진입 차단
- 규제 범위가 부품·유통·기인증 제품으로 확대, 데이터센터·AI 인프라로 확장 가능성
- 국가중립적 생산지 기준 적용으로 우리 기업 대미 수출품도 부품 조달 경로에 따라 영향권

1. 조사 배경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실질적 '수입규제 기관'으로 역할 확대 중

• FCC는 무선주파수(RF)를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자기기에 대해 수입·판매·유통에 필요한 '장비 인증(Equipment Authorization)'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

- 최근 'Covered List'(국가안보 위험 목록)와 '장비 인증 권한'을 연계하여 해외생산 드론·라우터·첨단 이동형 로봇·전력 인버터 등의 미국 시장 진입 규제

□ 생산지 중심 규제 확대로 우리 기업의 수출·공급망에 대한 영향 우려 증가

• 최근 FCC 규제는 '국가 중립적' 생산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

- 드론·로봇·인버터(태양광·ESS)·네트워크 장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첨단산업 분야와 규제 대상이 중첩되고 있어, 대미 수출 및 현지 사업전략에 영향 예상

2. 최근 정책 동향

□ (개요) 품목 중심 규제에서 대상·행위자·시점·절차 전반으로 규제 확대

• FCC는 '25년 이후 Covered List에 신규 품목을 등재하는 동시에 장비 인증과 공급망 관리 규칙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

- 규제 범위는 ① 대상(완제품 → 부품), ② 행위자(제조사 → 유통 플랫폼 및 시험기관), ③ 시점(신규 인증 → 기존 인증제품), ④ 심사 절차(등재 여부 → 부품·공급망 검증) 등에서 다각적으로 확대

□ **(대상 확대) 등재 기업의 핵심부품을 탑재한 제3자 완제품까지 인증 금지**

• ’26.7.22 「제3차 보고·명령(Third Report and Order, FCC 26-50)」에서 등재 기업이 생산한 ‘로직 탑재 하드웨어 부품’을 포함한 기기의 인증 금지

- **주요 대상** : ① 9kHz(초당9,000회)를 초과하는 타이밍 신호를 생성·사용하는 부품, ② 데이터 처리 기능을 위해 무선주파수(RF) 에너지를 생성·사용하는 부품, ③ 통신모듈, 무선 칩셋, 집적회로(IC), 보안칩(TPM) 등(디지털 로직이 없는 기계적·구조적 부품은 제외)

□ **(행위자 확대 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까지 FCC 규제 의무 확대**

• FCC는 「제3차 보고·명령」을 통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규제 대상 장비를 게시·판매하는 행위가 FCC의 ‘마케팅’ 규제에 해당함을 명확화

- 미인증 전자기기나 Covered List에 등재된 기기가 직구·제3자 판매망을 통해 미국에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취지

□ **(행위자 확대 ②) 시험·인증 생태계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을 퇴출**

• 등재 기업 등 ‘금지 주체’가 소유·통제하거나 지시를 받는 시험기관(Test Lab)·인증기관(TCB)은 FCC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25.5.22)

□ **(소급 적용) 기존 FCC 인증제품까지 소급 적용하여 신규 수입·판매 제한 확대**

• 이미 장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사후에 등재될 경우, 신규 수입·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마련(’25.10.28 「제2차 보고·명령」)

-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의 인증은 유지하되, 신규 수입·판매·마케팅을 금지

- ’26년 기존 인증을 획득한 드론에 대해서도 신규 수입·마케팅을 제한하는 규제 절차에 착수(8~9월 의견수렴 종료 후 최종결정 대기)

□ **(절차 확대) 제3차 추가 입법예고(FNPRM)를 통한 공급망 투명성·책임성 강화**

• 기존 등재 장비에 대한 인증 금지를 넘어, 인증 신청 단계부터 부품 공급망·생산 주체·미국 내 책임자를 종합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 추진

- ⑴ 규제체계 정비 : Covered List를 '생산자 기준'과 '생산지 기준' 항목으로 구분하고, '해외생산'·드론 핵심부품·라우터 정의를 규칙에 명문화

- ⑵ 금지 범위 확대 : 등재 기업 부품 금지를 모든 부품·SW·펌웨어로 확대할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재 분야(드론·라우터 등) 기기는 인증 의무화
- ⑶ 공급망 투명성 강화 : 인증 신청 시 핵심부품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 명세서(HBOM/SBOM) 제출 등을 통해 핵심부품의 제조·조달 경로 검증 강화
- ⑷ 책임·사후관리 강화 : 미국 내 책임자 지정, 인증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 정보관리 의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적합성 확보 추진

3. Covered List 등재 현황

1 통신·영상감시장비

• FCC는 중국 통신·영상감시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Covered List 규제 도입

- Huawei·ZTE 등 통신장비 기업 2개 사와 Hytera·Hikvision·Dahua 등 무전기 및 영상감시 기업 3개 사를 최초 Covered List에 등재('21.3월)
- 등재 기업의 신규 장비 인증 차단('22.11월)에서 '26.6월 기존 인증제품, '26.7월 핵심부품으로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 보안소프트웨어·통신서비스

• '22년 러시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정보보안 제품·서비스와 중국 국영 통신사업자의 미국 내 국제통신서비스 등을 Covered List에 등재

- 해당 규제는 통신사업 인허가, 통신망 접근 및 보편적서비스기금(USF) 사용 제한 등에 영향을 미쳐 우리 제조기업에 대한 직접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3 드론(UAS)

• 특정 기업 중심의 규제에서 해외생산 드론·핵심부품 전반으로 규제 범위 확대

-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709조는 중국 DJI·Autel 통상·영상 장비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심사 및 Covered List 등재 절차 등을 규정
- 이후 범부처 안보기구의 판정('25.12.21)을 근거로 ① 미국 외에서 생산된 드론 및 핵심부품 전체와 ② DJI·Autel 장비(1709조)를 동시 등재
-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소유구조가 아닌 제품의 해외생산 여부를 국가안보 규제 기준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 (중국산 중심 규제에서 글로벌 규제로 확대)

• FCC는 미국 정부의 보안 검증을 거친 제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산 드론 등에 대해 예외 적용 가능성을 마련('26.1월)

* **예외 대상** : ① 국방부 블루 UAS 목록 등재 제품, ② Buy American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제품, ③ 국방부·국토안보부의 조건부 승인 제품 (단, DJI·Autel 제품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

4 소비자용 라우터

• FCC, 소비자용 라우터에도 해외생산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안보 규제 적용('26.3월)

- 일반 소비자가 직접 설치·사용하는 가정용 라우터만 대상으로 하되, '생산'의 범위를 설계·개발 단계까지 폭넓게 규정
- 따라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하더라도 핵심 설계·개발 과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5 전력 인버터·첨단 이동형 로봇

• FCC, 생산지 기반 규제를 전력·에너지 인프라 및 첨단산업·서비스 기기로 확대

- 해외생산 전력 인버터와 첨단 이동형 로봇을 Covered List에 추가하여, 통신·네트워크 장비 중심이던 규제가 산업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7.28)

• (전력 인버터) 최초 등재 이후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미국 생산품 제외 규정 신설

- 후속 조치(8.20.)를 통해 규제 대상을 UL 1741 관련 계통연계형 인버터 중심으로 한정하고, 무선뿐 아니라 유선 통신 기능을 장착한 제품까지 포함
- 미국 첨단제조 세액공제(IRC Section 45X) 대상 인버터와 Buy American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제품은 목록에서 제외

• (첨단 이동형 로봇) 이동성·중량·센서·통신·자율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대상

- **요건** : 지상 이동이 가능한 기기(AMR·휴머노이드·4족 보행 등), 4.4lbs(약 2kg) 초과, 환경인식 센서, 200kbps 이상 통신, 자율주행·원격제어 소프트웨어

* 고정형 산업용 로봇(다관절·SCARA 등), 커넥티드 차량, 드론, FDA 의료기기 등은 제외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폴리티코(9.23.), Wiley(7.29.), FCC 홈페이지 및 연방 관보 등

(규제) 美 재무부, 해외투자 규제 위반 첫 민사제재…투자액의 2배 벌금

■ 미 재무부, 해외 자회사의 대중 AI 투자 신고를 누락한 미 기업에 첫 민사제재(벌금) 부과
■ 소액 투자와 해외 자회사 거래에 대한 점검 및 투자 초기부터 규제 검토 필요성 제기
■ 미국과 연계된 대중 첨단기술 투자의 적용 요건과 COINS법 후속 규정 점검 필요

1. 개 요

□ 미 재무부, 대중 첨단기술 투자 관련 신고 의무 위반에 첫 민사제재 부과

• **재무부는 해외투자안보프로그램(OIS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국 기업 아미디(Amidi)에 20만 달러의 민사제재 벌금 부과 사실을 발표(10.7)**

*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OISP):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행정명령 제14105호에 근거한 해외투자 규제 제도

- '25.1월 제도 시행 이후 첫 민사제재 사례로, 중국 소재 자회사의 투자에 대한 미국 모회사의 신고 의무 미이행이 제재 사유

- 재무부는 '26.7월 제재금을 부과하고 10.7일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적 우위 유지와 '미국 우선 투자정책' 추진을 위한 집행 의지를 강조

• **재무부는 우려국의 핵심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의 규제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

- OISP는 중국·홍콩·마카오와 관련된 기업의 특정 AI·반도체·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대상으로 규정

* 미국인(U.S. person)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해외지점, 미국 내 있는 사람·법인 등을 포함

- '25.12월 제정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에 따라 향후 대상 국가와 기술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

2. 상 세

□ 해외 자회사의 중국 AI 기업 투자에 대한 신고 누락 적발

- **아미디의 중국 소재 자회사 펀드는 중국 기업 노이매트릭스(Noematrix)에 약 9만 2,478달러를 투자했으나('25.4.19), 모회사 아미디는 신고 의무를 미이행**
  - 노이매트릭스는 AI·로봇·체화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재무부는 해당 투자가 OISP상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 OISP는 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이 신고 대상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미국인에게 재무부 신고 의무 부과
- **재무부는 정기적인 규정 준수 점검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거래를 적발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금 부과**
  - 제재 여부 판단 시 개별 사실관계와 집행 지침상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재금 산정 방식은 미공개

□ COINS법에 따른 대상 국가·기술 분야 확대 등 후속 규정 마련 예정

- **'25.12.18일 제정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은 OISP 대상 국가·기술 분야 확대 등을 규정**
  - 대상 국가에는 쿠바·이란·북한·러시아 및 마두로 정권하 베네수엘라 등을 추가하고, 기술 분야를 고성능 컴퓨팅·수퍼컴퓨팅 및 극초음속 시스템 등으로 확대 예정
  - 후속 규정 마련 기한은 '27.3.13일이며, 새 규정 시행 전까지 현행 OISP 규정 적용

3. 반응 및 시사점

□ 주요 로펌, 소액투자도 집행 대상임을 강조하고 투자 초기부터 규제 검토 권고

- **폴 와이스(Paul, Weiss)는 이번 사례가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집행하겠다는 재무부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평가**
  - '25.1.2일 이후 완료된 거래 중 해외 자회사·펀드의 소액·소수지분 투자를 포함해 신고 누락 여부를 재점검할 것을 권고

- 해외 지배법인까지 투자 승인 절차와 교육을 적용하고, 투자 대상에 대한 실사 과정과 확인 내용을 문서화할 필요성 강조

• **심슨 대처 앤드 바틀렛(Simpson Thacher & Bartlett)은 투자 발굴·펀드 구조 설계 초기부터 OISP 검토를 반영할 것을 권고**

- 계약 체결 전 투자 대상과 규제 대상 국가·기술 분야의 연관성 확인을 강조하고, OISP가 거래 성사 가능성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

• **윌머헤일(WilmerHale)은 이번 제재가 해외투자 규제 집행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집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투자자는 재무부뿐 아니라 OISP 준수 의무를 관리하는 공동투자자·대출기관 등의 준수 확인 요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미국과 연계된 대중 첨단기술 투자구조 및 거래 관리체계 점검 필요**

• **미국 현지법인이나 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대중 첨단기술 투자 시 OISP 적용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

- 미국 현지법인의 투자 금지·신고 의무와 해외법인 거래에 대한 미국 지배주체의 신고·금지거래 예방 조치 의무를 구분해 검토

• **미국 투자자와 대중 첨단기술 공동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의 기술·지분구조 등에 관한 정보 확인 요구에 대비**

- 미국 투자자의 참여만으로 우리 기업에 동일한 의무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별 투자·지배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 검토

• **미국인이 투자 의사결정 참여하는 경우 COINS법 후속 규정 점검 필요**

- COINS법은 미국인이 비미국 기업의 신고 대상 거래를 알고 지시하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해, 후속 규정의 구체적인 요건 확인 필요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미 재부무(10.7), 폴 와이스(10.8), 심슨 대처(10.9), 윌머헤일(10.9)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적법성에 대한 정부·원고 간 법정 공방 지속

- **美 법무부(DOJ)·원고 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추가 질의에 서면 답변 제출**(10.16)

-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강제노동 관세 관련 ①불합리성 판단의 법적 근거, ②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 고려 의무, ③非수입국 대상 원고적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입장 요청(10.2)

* 이에 앞서 재판부(Jennifer Choe-Groves, Timothy Reif, Lisa Wang 판사)는 구두변론 진행(9.30)

※ (배경) 美 무역대표부(USTR)가 60개 경제권에 부과한 강제노동 301조 관세(10~12.5%)에 대해 Learning Resources 등 수입업체가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 제기(7.24)

- **美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비를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한 301조 근거 조항과 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 고려 의무* 여부가 핵심 쟁점**

* 노동권 침해라도 해당국 발전 수준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강제노동 301조 관세 소송의 정부·원고 측 입장 및 주요 쟁점〉

쟁점	피고 측(美 법무부)	원고 측(Learning Resources 등 수입업체)
법적 근거	‣ 301(d)(3)(A) 포괄 조항*에 근거 ‣ 판단 경로가 파악 가능 시 결정 효력 유지 주장	‣ 노동권·강제노동은 301(d)(3)(B)항**에 근거 ‣ (B)항도 자국 내 노동 관행만 대상이므로 수입금지 미도입에는 적용 불가 주장
경제발전 수준 고려 의무	‣ (A)항에 근거했으므로 고려 요건 미적용 ‣ (B)항에 근거했더라도 문구상 고려 여부는 USTR 재량 주장(※ 경제발전 수준 분석 미실시는 인정)	‣ 근거 조항과 관계없이 경제발전 수준 고려는 필수 절차 주장
행정절차법(APA) 위반 여부	‣ 경제발전 수준 미고려는 결론에 영향 없음	‣ 정부가 경제발전 수준 고려 의무 누락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자의적 결정임.
구제 방식	‣ 추가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결정 취소는 부적절	‣ 환송이 아닌 취소 필요
원고적격·구제 범위	‣ 경제권별 조치는 분리가 가능하며, 원고가 수입을 직접 입증한 경제권(8개국)에 한해 구제 가능	‣ 원칙적으로 전체 취소가 통상적이나, 최소한 모든 민간·주 원고의 직접 수입국은 포함해야 함.

[자료: Inside U.S. Trade]

* 301(d)(3)(A): 국제법상 권리 침해가 없더라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행위·정책·관행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 포괄 조항

** 301(d)(3)(B): 노동권 침해 관행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한 조항으로,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하는 예외가 적용

- 재판부가 추가 심리에서 301조 관세 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 고려를 관세 부과의 의무 요건으로 판단할지가 핵심 변수로 부각(Inside U.S. Trade)

▪ 자료원 | 인사이드(10.19), International Trade Today(10.19), 법무부(10.16), 원고(10.16)

(관세·제재)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및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대상 관세·제재 적용 면제

- **트럼프 대통령은 10.16일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동 법이 규정한 對러·러시아 에너지 구매국 대상 관세·제재 적용을 면제**

-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10.18일까지 △러시아산 수입품에 500%,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상위 5개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규정

- 트럼프 대통령은 동 법상 부여된 면제 권한에 따라 관세 및 다수의 제재 조항 적용을 면제하고, 국익 부합 인증서와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동 조치는 대통령 또는 국무장관이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며, USTR은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

- 그리어 USTR 대표는 동 면제 권한을 교역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및 세계 시장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초당적 상원의원 12명(민주·공화 각 6명)은 10.13일 서한에서 '디젤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합의 철회를 촉구

- 일부 의원은 동 합의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2022년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법」(Ending Importation of Russian Oil Act)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 자료원 | 인사이드(10.13, 10.16), 백악관(10.16)

(수출통제) 中, 이중용도 드론·준설 및 터널 굴착 장비 수출통제 확대

- **中 상무부는 드론·준설 장비·터널 굴착기 관련 수출통제를 발표했으며, '26.11.18일부터 시행 예정**

- 통제 대상에는 신규 유형의 드론 및 관련 부품·기술, 준설 장비용 머드 펌프·커터헤드, 기존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터널 굴착기 등이 포함.

- 中 상무부는 해당 품목을 군사·민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관련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

- 中은 희토류 수출 제한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확대 추진에 이어 드론·산업 장비 등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

- 중국은 세계 굴착 장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관련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터널 굴착 장비는 군사시설 등 지하 방호시설 건설에, 준설장비는 해군 시설 건설에 활용

- **中 상무부·해관총서는 군민양용 품목 식별을 위한 수출 심사·감도도 즉시 강화**

- 수출자는 7영업일 내 수출 물품의 거래 영수증 및 운송서류 제출, 질의·감정 기간(세관 15영업일, 상무부 15 영업일 이내) 중에는 통관이 보류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여행객 휴대 수하물·우편·특송 화물에도 적용

-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출 절차 및 서류 부담이 가중되고 조달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제 동향과 공급망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현지 언론은 중국이 핵심 산업의 수출통제를 확대해 드론·산업장비 등 주요 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보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

▪ 자료원 | 블룸버그(10.19), 로이터(10.19)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관세 (10.6)	H.R.10759 (10.6)	John James (공)	〈2026년 미국 개발 및 고용을 위한 관세 구제법 (Tariff Relief for American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26)〉 ▪ 관세 및 보복 조치로 피해 입은 미국 제조업체, 근로자, 농가 및 공급망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와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법안

* 10월 20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ITIF	10/28(수) 1:00 pm	〈Immersive Technology in the Classroom: Making Sense of Immersive XR in Education〉 ▪ 몰입형 기술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XR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살펴보고, 교육기관·교사·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방안을 논의	링크
CSIS	10/28(수) 2:00 pm	〈China's Power: Up for Debate 2026-Day 1〉 ▪ 미중 관계 현황, 중국의 다차원적 국력 변화, 대외·안보정책 및 미중 경쟁의 향방에 대한 핵심 쟁점 논의	링크
CSIS	10/29(목) 9:15 am	〈China's Power: Up for Debate 2026-Day 2〉 ▪ 미중 관계 현황, 중국의 다차원적 국력 변화, 대외·안보정책, 그리고 미중 경쟁의 향방에 대한 핵심 쟁점 논의	링크

* 10월 20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s D.C. Golf Course Renovation Spurs New Legal Tensions (워싱턴 공공 골프장, 나무 400여 그루 벌목에 법적 공방 고조)
	워싱턴DC 공공 골프장 전면 개조를 둘러싸고 나무 400여 그루 벌목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착공을 예고했으나 법무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재판부와의 갈등이 고조
The Washington Post	How a photo of a patient's face could predict whether they'll survive cancer (얼굴에 담긴 건강 신호, AI로 암 환자 사망 위험 예측)
	미국 보스턴 매스제너럴브리검 연구진이 얼굴 사진 한 장으로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AI를 개발했으며, 위험 점수 상위 10%의 90일 내 사망률은 약 50%, 하위 10%는 약 2%로 나타나
The New York Times	$137 Million in A.I.-Generated Ads Flood the Midterms (美 중간선거 AI 광고 확산…약 70%는 사용 표시 없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선거광고 집행액이 올해 1억 3,700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웨슬리안대 연구진이 분석한 광고 약 70%는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Reuters	US to launch $8 billion support program for farmers to offset diesel costs, Trump says (美, 수확철 경유비 부담 완화에 농가 80억 달러 지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9일 캔자스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경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80억 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농무부는 올해 손실 추정액의 일부를 일회성 지원금으로 지급할 방침
Bloomberg	US Moves to Bar China's DeepSeek From Federal Agency Systems (美, 연방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정부 계약 참여 차단)
	미 국토안보부는 민감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간 연방기관의 딥시크 사용과 정부 조달 참여를 금지하고, 기관 시스템에서 관련 제품을 삭제하도록 한 명령을 공개

* 미국 동부 시간 10월 20일 14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32	美 데이터센터 산업·인프라 및 정책 동향	2026.10월
US26-31	캐나다 대응 관세 발효 및 美 338조 수입금지 조치 주요 내용	2026.10월
US26-30	드론 정책 사례로 본 미국의 통합적 안보통상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9월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